

[종합·해설]

■ 광주 방문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인터뷰

“전남 조선산업 전폭 지원 이끌어 낼 터”

“대한조선을 중심으로 조선 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며 한나라당 내 소장파를 이끌고 있는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15일 광주를 방문,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나후된 전남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조선산업클러스터가 추진 되는 등 조선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

대한조선 등 선박산업 활기 바람직

호남 소외 못느끼게 인재 대폭 등용

한 일이다”며 크게 반겼다.

선거 후 여권 내 권역지형이 재편되는 미묘한 시점임을 의식한 듯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그는 광주공항 귀빈실에서 만났다.

“당에서 직할도 없는 사람이 공식 일정이 있나요. (웃음) 선거 후 광주·전남 당원들의 소외감을 달랠주고 위로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탑양선선에 계신 아버님도 봐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광주에 내려왔을 뿐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 대통령의 양날개로 불리는 이방호·이재호 의원이 낙마,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과 관련, 정 의원은 ‘포지션’은 밝히지 않았지



심을 모았지만, 지역에선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물자 정 의원은 어색움을 토로했다.

“호남인들의 기대만큼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다르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인재를 등용할 때 호남을 배려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참여 정부에서 ‘호남의 체널’로 활동했던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호남의 대변

한나라당 호남 비례대표 선정 잘못

여러 의견 들은 뒤 지도부 진출 고려

인’으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이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서 역차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한 만큼 호남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 우선 광주시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만 지도부 진출을 탄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제가 그럴 역량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생각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민의를 수렴한 뒤 깊이 생각해보겠다는 게 정답이죠.”(웃음)

이번 총선을 통해 광주·전남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거 배출될 수 있을지 관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MB 최측근 정두언 광주 방문 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의 15일 광주 행보는 그가 한나라당 내 호남세력의 리더를 자임하겠다는 것과 당내 최고위원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의 ‘원조 측근’인 이방호·이재호 의원 등 전진들이 낙마함에 따라 지도부 공백을 메워줄 ‘대안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당내 소장파의 핵심 리더다.

정 의원의 15일 광주 방문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 전남 선대위 해단식’ 참석이지만 당내 공식 직할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광주·전남 총선후보 낙선자들을 초청, 위로 오찬·만찬을 가진 것만 봐도 그가 향후 호남세력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자리에 광주·전남 한나라당 총선 후보로 나섰던 20명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것만 봐도 대통령 최측근인 그에게 거는 지역의 기대를 말해준다.

그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이어지고

‘포스트 DR(김덕룡)’ 호남 리더역 자임

당내 차세대 경쟁…최고위원 도전 시사

있는 일련의 ‘호남소외 우려’ 정책들에 대해 지역민들이 소외론을 거론하자 자신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깊이 동조한 것이나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 나타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당은 선거 때만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은 호남의 리더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진 한나라당 내에서 자연스레 자신의 외연을 확대한 것과 다름없다.

또 인터뷰에서 정 의원이 “지도부 진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북의 김덕룡 의원이 맡아오던 한나라당내 호남 봉지도부 진출을 시사한다. 정 의원은 이미 청와대에서 ‘도종의 역할’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서둘러 귀경하던 평소와 달리 광주 지역 인사들과의 만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오전에 탑양 선산 성묘를 마친 뒤 한나라당 전남 도당 당직자 오찬에 이어 오후에는 친·인척들과 개인적인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당직자는 “정 의원이 당 대표와 사무총장에게 호남 당원들을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정 의원이 조만간 위상변화를 시도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경필·원희룡 의원과 함께 차세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가 이번 광주·전남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한나라당내 ‘신주류’의 리더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檢, 양정례 당선자 의혹 본격 수사

관련 서류 일체 요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4·9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30·여) 당선자의 학력·경력 위조 및 거액 특별당비 납부 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양 당선자의 후보등록과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양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온 상태여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당선자의 자료는 이번에 함께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대학원인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양 당선자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며 학력을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로 썼지만 14일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기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양 당선자는 또한 ‘친박 조직’으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지만 비례대표 선정 과정과 학력·경력을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례 당선자가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대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알려진 새시대새물결 ‘여성청년 간사’라고 자신을 소개해왔지만 이 단체에는 이 같은 직함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경력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를 둘러싼 학·경력 위조, 재산신고 누락 및 거액 특별당비 납부 의혹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8명 중 6명은 100만원씩, 1명은 5천만원의 특별당비를 냈지만 양 당선자의 경우 1억1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제 개선·보완해야”

대가성 논란에 기존 취지 무색…정치권도 자성 목소리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관련한 여러 잡음이 한꺼번에 불

거지면서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제도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충족할 수 없는 각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국회 전체 의석수 299석 중 54석을 차

지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수가 배분된다.

비례대표의 전신인 전국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3년 제6대 국회로, 5·16 군신들의 ‘논공행상’을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 핵심의 정설. 그러나 전국구 제도는 후보들로부터 거액의 정치헌금을 받는 ‘공천장사’ 등의 폐단으로 인해 ‘錢

국’으로 불리면서 오랜 세월 폐지 논란에 시달려왔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지 반세기마다 돼 가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비례대표 후보의 특별당비에 ‘대가성’ 논란이 불거지고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는 공천 대가로 당의 실세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설이 파다하다.

당선 직후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전과 4범’이 무난히 원내에 입성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총선 당선자 절반 “대운하 반대”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절반 이상

특히 조사에 참여한 한나라당 당선자 129명 가운데서도 찬성은 43명(33.3%)에 그쳤으며, 반대(23명) 또는 모름·무응답(63명)이 66.7%나 돼 대운하 사업은 여당 내에서도 추진력이 높지 않다. 이 조사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172명(68.5%)이 찬성하고 52명(20.7%)은 반대했다.

하더라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5일 전망됐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경우 당선자 299명 중 251명을 대상으로 한국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5명(53.8%)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47명(18.7%)에 그쳤으며, 나머지 69명(27.5%)은 ‘모름·무응답’에 답했다.

19%만 대운하 건설 찬성

한나라도 찬성 33% 불과

‘포스트 DR(김덕룡)’ 호남 리더역 자임

당내 차세대 경쟁…최고위원 도전 시사

있는 일련의 ‘호남소외 우려’ 정책들에 대해 지역민들이 소외론을 거론하자 자신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깊이 동조한 것이나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 나타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당은 선거 때만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은 전북의 김덕룡 의원이 맡아오던 한나라당내 호남 봉지도부 진출을 시사한다. 정 의원은 이미 청와대에서 ‘도종의 역할’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터뷰에서 정 의원이 “지도부 진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북의 김덕룡 의원과 함께 차세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가 이번 광주·전남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한나라당내 ‘신주류’의 리더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제4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The 47th Jeollanam-do Sports Festival Goheung 2008

2008. 4. 22 ~ 4. 25